

與, 추석 밥상에 '비대위 시즌2' 올린다... 사법리스크 변수

당헌 개정안 오늘 전국위서 의결
중진 의원들, 새 비대위 출범 반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결과 걸림돌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 위해 분주하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은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8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새 비대위 임명 절차까지 거치면 비대위 출범은 마무리된다.

새 비대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고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석 전까지 빠르게 내부 갈등을 수습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비대위원장도 사실상 유임하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 주 비대위원장이 거론된 이유로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비대위 이후 당은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출범 이후 거취 표명할 계획인 만큼, 새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원내대표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고려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 비대위원장이 앞서 당으로부터 동의받아 비대위를 이끌어간 상황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으로 직무 정지됐을 뿐, 비대위 활동을 두고 반발 여론은 없었던 만큼 사실상 연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당헌·당규를 고쳐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문제도 해소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현 비대위원

임태영 의원이 한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같은 구성으로 비대위가 꾸려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추석 밥상에 '법원 판결 받은 1차 비대위가 그대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비대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추석 전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당 내부 갈등이 해소될지 미지수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찬반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5선 서병수 의원은 상전위, 전국위 의장직 사퇴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맞서 조·재선 의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는 해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거리를 두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부 논쟁이 커질 때마다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도 새 비대위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법원은 14일 가처분 심리를 할 예정이다.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에게 손 들어준 법원이 이번에 같은 판단을 하면, 당 내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당에 손을 들어주면,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시비는 당장 가라앉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충남도의회 특강에서 "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봤는데 비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꿔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판사가 수긍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우리는 더 해볼 게 없고, 결국 우리 당의 운명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당심과 민심에서 떠난 사람은 돌아온다고 해도 역할을 하거나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우리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1면 '尹 "태풍에 완벽 대응"'서 계속

野, 이재명 檢 소환에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민주당 "납득 어려운 야당 탄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통보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협치를 당부한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은 경색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는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사건의 실체가 낱알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한사라도 빨리 실제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뉴스타파는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 측이 제시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탁했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2010년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워낙 많은 사안이 쌓여 국민들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털고 가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띄웠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시도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대통령 '취약계층·지역 점검 강화'

윤 대통령의 선제적 가동을 포함한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지시하는 배경에는 지난달 초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당시 '재택 지시'에 대한 논란이 있던 만큼 빈틈없는 태풍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한남도가 큰 피해를 남기고 한반도를 통과할 경우, 추석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태풍 상륙 시의 비상 대응 체계, 신속한 복구와 사후 지원책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들의 태풍피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과거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1959년의 '사라'와 2003년 '매미'보다도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남도는 오는 6일 경남 남해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익 기자

尹정부 사실상 첫 檢총장... 與野 설전 예고 대통령실 "조직개편, 추석 전 큰 매듭 목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검증에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탈북 여민 복송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설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시도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장관 인선은 추석 이후

대통령실이 안정적인고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전 조직개편에 대한 큰 매듭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공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등의 이유로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추를 꿴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각오

하에 인적개편의 큰 단락은 추석 전에 매듭지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부총리 및 장관 인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말처럼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부처 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에서 총력을 다하되, 장관과 부총리 인선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일도양단 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인선의 특징임을 양해해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